

美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안)

통상연구실

'25.12.9.(화)

1. 개 요

- ☐ (일시) '25.12.19(금) 15:00~16:30 ※ (보도계획) '25.12.20(토)
- ☐ (장소) 삼성동 코엑스 308호
- ☐ (목적) 美 IEEPA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26년초 예상)로
행정부 패소 시를 대비해 관세환급 절차 및 기업 대응전략 등 설명
- ☐ (주요내용)
 - 美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시 예상 절차
 - 관세환급 실무, 과거 유사 사례 및 기업 대응전략

2.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인사 말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15:05~15:15	10'	[Intro] 美 IEEPA 관세 내용과 소송 동향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15:15~15:45	30'	[발표1] 관세 환급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 ① 판결 시나리오별 관세 환급 범위 ② 관세 환급 절차 및 주요 법적 쟁점 ③ 기업 유형·상황별 맞춤 전략(이의제기, 소송 등)	법무법인 세종 윤영원 변호사
15:45~16:15	30'	[발표2] 관세 환급 실무 및 유의사항 *순차통역 ① 관세 환급 실무 및 사전 준비사항 ② CBP 내부 프로세스·관행 및 과거 유사 사례 ③ 계약·인코텀즈에 따른 환급권 이슈	법무법인 김앤장 존 레너드 고문 (前 CBP 부국장)
16:15~16:30	15'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 (배경) IEEPA 관세의 환급 가능성 및 절차 관련 기업 문의가 증가하여, 워싱턴지부 계약 로펌(Akin)에 자문을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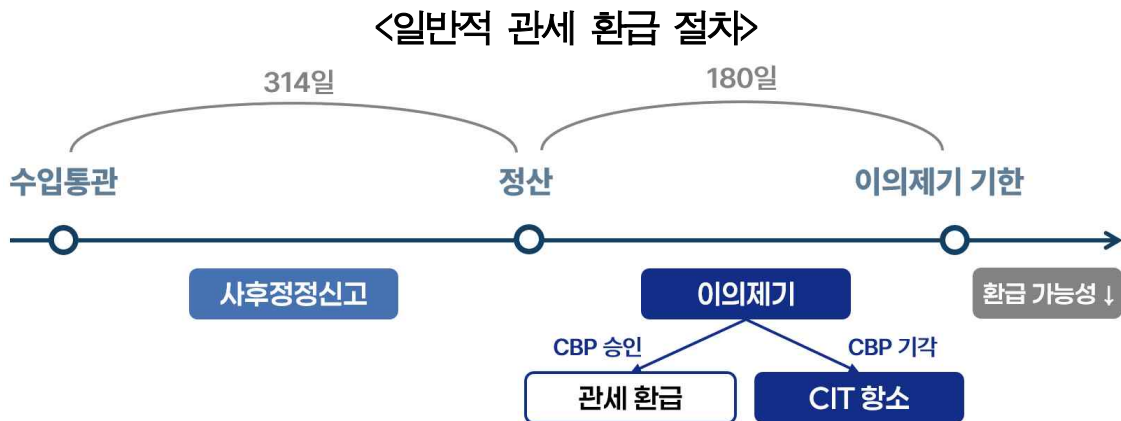
□ 판결 전망 및 관세 환급 범위

- 現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음
- 위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관세 환급 범위를 소송 원고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나, he기업도 판결에 근거해 관세 환급 절차 진행 가능

□ 관세 환급 절차

- 관세 환급 방식은 불확실하나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
- 환급 방식은 각 수입신고 건의 정산(liquidation)*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정산(liquidation)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한 관세액을 관세청(CBP)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314일 소요



- (① 정산 前) 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입자는 건별로 사후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PSC)만 제출하면 되어 절차상 불확실성이 낮음
- (② 정산 後) 정산일로부터 180일 내에 美 관세청(CBP)에 이의제기(protest)를 해야 하며,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져 불확실성이 높음
 - CBP가 정산은 대통령의 관세 결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해 이의제기 대상인 '결정(decis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음
 - 이의제기가 기각될 경우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 제기 필요

□ 기업 권고사항

(1) 정산 건에 대한 환급은 적시에 이의제기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어 이의제기는 필수

- 비용 효율성 면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고
-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환급권 보전을 위해 미리 이의제기를 하고 CBP에 판결 전까지 결정 유보를 요청할 필요

(2)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을 구하기 위해 선제적 소송도 가능하나, 유사 소송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 정산 이후에는 환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정산을 막기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선제적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
 - 정산이 12/15부터 본격화되나, CBP는 정산 보류·연기 요청을 거절 중
- 정산 후에도 이의제기 및 기각 시 CIT 제소가 가능하고, 소송 비용, 사건 기록 공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다만 향후 몇 주 내 대규모 정산이 예정된 기업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로서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을 구할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

(3) IEEPA 관세 납부 내역 및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사·공급업체·고객과 환급금 분배·정산 방식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 건을 정확하게 취합·정리하고 각 건의 정산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함
- 한국 수출자는 환급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현지 자회사 또는 수입자와 협력해 필요 서류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 끝.